

대안적 공공공간으로서의 로컬의 전망

이 상 봉 (Lee, Sang-Bong)**

(E-mail : sanbolee@pusan.ac.kr)

논문접수일 : 2009년 12월 23일

논문심사일 : 2010년 1월 27일

게재확정일 : 2010년 2월 8일

* 학위취득대학: 부산대학

현직: 부산대학 한국민족문화연구소 HK교수

대안적 공공공간으로서의 로컬의 전망*

<국문요약>

IT기술의 발달에 따른 근대적 시공간 개념에 대한 근본적인 변화와 신자유주의를 앞세운 글로벌화의 확산은 근대적 공공공간의 상징인 국민국가구조에 커다란 변환을 초래했다. 국가경계를 넘어서는 상호관계의 증대와 국가 내부의 분권화 진전에 따른 로컬공간의 자율성 증대가 동시에 진행되면서, 이른바 공공공간이 중층화·다원화되고 있는 것이다. 이른바 글로벌라이제이션(Glocalization)으로 표현되는 이러한 공공공간의 변환을 로컬공간의 입장에서 바라보고자 하는 것이 이 글의 출발점이다. 기존의 공공공간 변환에 관한 논의는 주로 국가 중심적 시각과 글로벌적 시각의 상관관계 속에서 이루어져 왔다. 즉, 국민국가의 경계를 넘어서는 글로벌 질서의 형성 가능성과 국민국가 체제의 지속이라는 논점이 논쟁의 중심이 되었다. 그러나 국민국가체제의 약화를 가져온 계기가 글로벌화와 로컬화, 즉 국민국가체제의 밖과 안에서 동시에 발견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한다면, 로컬공간이 새로운 대안적 공간으로 자리매김 될 가능성을 발견할 수 있다. 이 글은 국가공간으로 상징되는 근대적 공공공간에 대비되는 대안적 의미에서의 로컬공간, 즉 집권과 대의제에 대비되는 참여와 분권, 제도와 통치에 대비되는 일상과 거버넌스, 포섭과 배제에 대비되는 장소성과 저항정체성의 공간으로서의 로컬공간의 가능성을 제시한다.

[주제어] 공공공간, 로컬공간, 로컬리티, 대안민주주의, 생활정치, 거버넌스, 장소성

* 이 논문은 2007년 정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KRF-2007-361-AL0001)

I. 시작하는 말

근대성에 대한 극복이든 아니면 성찰 또는 계승이든, 한국사회에서도 다양한 분야에서 이른바 ‘탈근대’에 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이성에 대한 신뢰, 합리주의, 인간주의, 진보와 해방 등의 핵심 가치를 지향하며 출발한 계몽주의적 근대성이 물질화, 권력화, 법칙화, 비인간화 등의 부정적인 결과로 이어지면서, 이를 보완하거나 극복할 대안 마련이 필요했기 때문일 것이다. 근대성을 구성하는 여러 가지 요소들 가운데 특히 정치적인 측면에 주목하면, 근대성은 국민국가라는 공간을 중심으로 제도화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즉, 내부적 동질성과 대외적 배타성을 특징으로 하는 주권국가들로 세계가 구성되었고, 그 과정에서 지방은 국가의 하부단위로 포섭되거나 배제되어졌던 것이다. 이러한 국민국가 중심의 근대적 공간구조가 최근 들어 급격한 변환을 겪고 있다. IT기술의 발달에 따라 근대적 시·공간 개념에 근본적인 변화가 나타나는데다, 신자유주의적 글로벌화의 확산에 따른 국민국가 경계의 약화와 국가 내부의 분권화의 진전에 따른 로컬공간¹⁾의 자율성 증대가 동시에 진행되면서, 이른바 공공공간이 중층화, 다원화되고 있는 것이다.

글로벌라이제이션(Glocalization), 즉 글로벌화와 로컬화의 동시진행으로 표현되는 이러한 공공공간의 변화를 로컬공간의 입장에서 바라보면 어떤 해석과 전망이 가능한가? 이것이 이 글을 쓰게 된 출발점이다. 기존의 글로벌화와 탈근대를 바라보는 시선은 대체로 글로벌적 시각과 국가적 시각이 주류를 이루어 왔다. 즉, 국민국가 경계를 넘어서는 글로벌 질서의 형성 가능성과 국민국가의 지속이라는 논점이

1) 로컬은 주로 전체체제의 하부에 위치하는 국지적 영역을 의미하는 말로, 지역 또는 지방이라는 용어와 유사하게 사용되고 있다. 지역이라는 말이 비교적 가치중립적인 개념으로 사용되고, 지방이라는 말이 주로 위계성을 나타내는 개념으로 사용되는 경향이 있으나, 이 또한 분과학문영역에 따라 일정치 않다. 여기서는 지역 또는 지방을 포괄하는 의미에서 로컬이라는 용어를 그대로 사용한다.

논쟁의 중심이 되어온 것이다. 하지만 탈근대가 지향하는 바와 글로벌화의 전개양상을 유심히 살펴보면, 로컬공간이 새로운 대안적 공간으로 자리매김 될 가능성 또한 발견된다.²⁾ 로컬공간은 더 이상 단순한 공동체(community)의 의미나 국가 하부의 행정기관 정도로 머물지 않으며, 상대적이지만 내부적으로 완결된 하나의 사회구성체, 즉 정부-시장-주민의 관계를 바탕으로 사회·정치적 작용이 완결되는 단위인 것이다. 특히 근대성에 대한 성찰에서 비롯된 탈근대성의 관점에서 로컬공간을 바라볼 경우, 중앙/지방, 주체/타자, 체제/일상, 공간/장소와 같이, 근대성의 이분법적 중심-주변구조 속에서 배제되거나 묻혀버렸던 다양한 가치들이 로컬에 내재해 있다는 점에서 로컬공간은 '성찰적 자본주의'의 기반이 되기도 한다(Stoper 1997).

로컬공간이 복합적인 사회구성체인 만큼, 공간단위로서의 로컬공간의 의미 또한 지리공간, 경제공간, 문화공간, 정치공간 등의 다양한 측면에서 분석되어질 수 있다.³⁾ 하지만 이 글에서는 국가공간으로 상징되는 근대적 공공공간에 대비되는 대안적 의미에서의 로컬공간에 주목한다. 즉, 중앙집권과 대의제의 공간인 국가공간에 대비되는 분권과 참여의 공간, 제도와 통치의 공간인 국가공간에 대비되는 일상과 거버넌스의 공간, 그리고 포섭과 배제의 공간인 국가공간에 대비되는 장소성과 저항정체성의 공간으로서의 로컬공간의 가능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탈근대적 전망과 관련하여 로컬공간의 적극적인 의미를 다룬 기존의 글들은 그리 많지 않다. 조명래(2002, 2006), 최병두(2002a)는 지리학과 정치학의 경계를 넘나들면서 탈근대 및 글로벌시대의

2) 이와 관련하여 스코트(A. Scott)는 로컬이 새로운 종류의 사회적 공동체, 그리고 시민권과 민주주의의 실천적 이슈에의 새로운 접근을 위한 기본적 틀이 된다고 강조한다(Scott 1998, 11).

3) 지리학과 같은 공간 중심적 연구에서는 로컬이나 로컬리티가 개념적·조작적 분석단위가 될 수 있으며,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로컬은 세계경제를 구성하는 영토단위로서 그 중요성이 제고되고 있다. 특히 조절이론에서는 로컬을 포스트포드주의적 경제체제의 체도가 구축될 수 있는 유효한 장으로서 이해하거나, 지역을 새롭게 형성되고 있는 세계경제질서에서 모터로서 평가한다(최병두 2002a, 135-141).

지역발전과 관련하여 지역의 의미를 적극적으로 찾고 있다. 하지만 정치학 또는 행정학 분야에서 이루어진 지방정치 및 지방자치 관련 논문들에서는 로컬공간을 국가의 하부공간이나 법 또는 제도에 의해 주어진 것으로 보는 경향이 강하며, 정치원리 또는 가치의 의미, 특히 대안적 가치의 의미에서 로컬정치에 접근하려는 논의는 그리 많지 않다. 이 글은 기존의 민주주의 또는 지방정치 관련 논의들에서 산발적으로 제시되고 있는 로컬공간의 의미를 정리하고, 앞으로의 로컬공간에 대한 연구 방향을 모색한다는 점에서 일종의 시론적 성격을 지닌다.

II. 공공공간의 중층화 · 네트워크화

1. 근대성과 국민국가

근대의 계몽주의적 기획은 국민국가라는 공공공간의 형성과 발전을 통해 제도화 되었다고 볼 수 있다. 즉, 국민국가는 근대성의 제도화에 있어 핵심적인 부분을 차지하며, 특히 정치, 경제, 문화적 공간 단위의 측면에서 근대성의 전형적인 특징을 이루었다. 이러한 경향은 근대성의 확장과 함께 점차 일반화되어 갔으며, 학문 분야에서도 국민국가는 표준적인 분석 단위로 자리매김 했다. 국민국가 중심의 시각에 대한 비판으로 세계체제를 분석단위로 보고자 하는 ‘세계체제론’이 등장하기도 하지만(월러스틴 2005, 48), 전체적으로 볼 때 역사가들은 국가사를, 경제학자는 국민경제를, 정치학자는 국민국가의 정치구조를, 사회학자는 민족사회를 주된 분석대상으로 삼고 있었다.

근대성이 국민국가를 단위로 제도화되는 과정은 정치(민주주의/자유주의), 경제(자본주의), 문화(민족문화) 등의 제 측면에서 각기 또는 상호관계 속에서 설명 가능하다.⁴⁾ 우선 정치적인 측면에서, 근대국가가

4) 스미스(A. D. Smith)는 근대성의 도래를 보여주는 ‘세계의 혁명’ 즉, 경제통합,

는 근대성의 기획의 산물이다. 홉스에서 루소에 이르는 사회계약론의 전통은 이성적으로 사고하고 합리적으로 행위 하는 개인에서 출발해, 어떻게 사회질서를 제도화 할 것인가에 대해 고민하였다. 그에 대한 해답으로 나온 것이 국민을 구성하는 개인(시민)들을 새로운 정치질서의 주권자로 등장시키는 근대국가 이론이었으며, 이러한 이론을 현실화 한 사건 가운데 대표적인 것이 프랑스혁명이었다. 이처럼 새로운 정치공동체로서의 국민국가 형성, 즉 국민(nation)⁵⁾과 국가(state)가 결합되는 과정에서 매개변수가 되는 것이 민주주의다.⁶⁾ 국민국가가 형성되는 과정은 군주권에서 국가주권으로 권력의 중심이 이동하는 과정이자 국민을 민주주의 시대에 적합한 이성을 가진 시민으로 만들어 내는 작업이며, 그 중심에 국가가 자리하고 있다.

정치적인 면에서 새로운 정치질서의 주체이자 주권자로 등장한 국민은 동일한 방식으로 경제영역인 자본주의 사회의 자본-임노동 관계 속에서 독립된 계약의 주체로 확립된다. 이와는 별도로, 국민국가 체제는 근대세계시스템이 자본축적을 위해 만들어낸 가장 중요한 제도의 하나로 파악된다. 여러 국가들이 경쟁적으로 존재할 경우, 자본가들은 특정 국가와 협조함으로써 이득을 얻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본에 적대적인 국가들을 피해 우호적인 국가들로 도망갈 수 있었다. 즉, 광범위한 분업체계 내부에 다수의 국가들이 경쟁적으로 존재

행정적 통제, 문화적 조정에 대한 대응으로서 국민국가의 형성을 설명한다 (Smith 1986, 152).

- 5) 혁명 초기에 시에예스(E. Sieyès)는 국민과 대표의 동일화를 가능케 하기 위해 다양한 개인들을 하나의 국민으로 추상화했다. 그가 사고하는 국민은 제3신분에 의해 표상되는 동질적인 사회집단이었다. 그는 인간들의 동질화가 하나로서의 전체 인민 그리고 국민적 결합의 첫 번째 조건이라고 적고 있다. 무엇보다도 국민의 동질성은 ‘공통의 법률과 공통의 대표’에 의해서 확보되는 것이었다.(홍태영 2002, 87)에서 재인용.
- 6) 민주주의의 매개역할은 세 가지 축을 통해 이해된다. 그것은 민주주의의 근대적인 주체를 형성하는 작업(시민권), 민주주의를 구체적으로 실현하는 방식(민주주의 형태, 국민주권의 제도화), 사회와 국가의 관계설정 방식(대의제)이며, 이는 프랑스혁명 이후 지속적으로 이데올로기적 정치투쟁의 쟁점이 되었던 문제들-국민/시민의 권리, 국민/인민주권, 대표-과 직접적으로 관련된다(홍태영 2002, 34-35).

하는 상황만이 이럴 가능성을 보장해 주었다. 요컨대, 근대 세계체제는 보편주의와 반보편주의 양자의 동시적인 전파와 실행을 그 체제 구조의 중심적 특징으로 삼았다. 이 대립적인 양극은 핵심부-주변부의 기축적인 분업만큼이나 근대 세계체제에서 근본적인 것이다(월러스턴 2005, 110).

왕정 시대의 주권자였던 왕을 대신해 등장한 국민(nation)은, 이론적으로는 공통의 이해와 전망을 가지고, 한정되고 통일된 영토적 단위에서 출발한 정치적이고 개방적인 개념이었다. 하지만 실제로 국민을 형성하는 과정에서는 다양한 하부단위들을 포섭할 필요가 있었고, 이에 따라 하부단위의 신화, 기억, 상징 등 다양한 속성들을 취하거나 배제하면서 동질화시켜 나갔다. 이 과정에서 국민은 유기체적인 개념으로서 사회적 위계를 담게 되었으며, 인종적이고 문화적인 개념으로 이해되기 시작했다고 볼 수 있다. 이처럼 근대국가에서의 국민 개념에는 인종적·문화적요소와 같은 비정치적인 요소와, 동일한 권리와 책임을 갖는 구성원이라는 정치적 의미가 혼재되어 있다. 국민의 본질적인 측면을 전자에 둔다면 국가는 인위체로서 민족의 특수한 이념을 구현하기 위한 도구적 성격을 가진다. 반면에 후자의 요소를 강조하면 국가는 보편적 질서의 담지자가 된다. 근대국가 이전 시대에는 문화적 제도가 세계종교처럼 다수의 사회에 퍼져 있거나 아니면 특정 지역을 중심으로 로컬화 되어 있었지만, 근대 국민국가의 출현으로 이러한 세계성과 로컬성이라는 두 차원의 중간 정도의 규모로 문화적 제도와 정체성이 창조되었고, 이에 근거한 문화적 하부구조가 점차 발전하면서 국가단위의 단일한 문화적 전통이 확산되었다.

이와 같은 정치, 경제, 문화적 맥락에서 형성된 근대 국민국가체제는 이전 체제와는 다른 뚜렷한 특징을 형성하게 된다. 그 대표적인 것이 영토적 통합성과 문화적 단일성이다. 우선, 근대국가는 영토성과 이에 근거한 주권성을 가진다. 국민국가와 그 확장으로서의 제국주의는 그 내부와 외부의 변증법에 의한 영역적 지배에 근거해 왔다. 이와 관련하여 베버(M. Weber)는 국가에 대한 매우 간략한 정의에서,

“주어진 영토 내에서 물리적 힘의 정당한 사용에 대한 독점권을 주장하는 인간 공동체”라고 파악하고, 이 공동의 권력이 일단 한 번 성립되고 나면, 그 권위는 동의로부터가 아니라 힘으로부터 나온다고 설명한다(Weber 1970, 78). 여기서 국민국가의 경계는 자연적으로 형성된 것이 아니라 역사적, 정치적으로 형성된 산물이다. 국민국가 경계 내의 국민 구성은 매우 복잡하지만, 이들을 묶는 공통의 끈이 바로 정치적 경계와 문화적 경계를 일치시키려는 의지이다. 이러한 논리에서는 제도로서의 국가와 국민은 구별되지 않는다. 그런데 국가와 국민은 다른 것이다. 시민공동체로서의 국민은 국가와 계약을 체결한 주체로서 그 권리와 의무가 동등한 시민 개인들의 총체를 말한다. 이러한 입장은 프랑스 공화주의적 국민주의가 갖는 특징이다. 이에 비해 민족공동체로서의 국민이란 혈통, 문화, 언어와 같이 과거로부터 물려받은 특징과 공통된 성격을 갖는 것으로 간주되는 개인들의 총체이다. 이러한 개념은 특히 독일 국민주의의 특징을 이룬다(마르티니엘로 2002, 23).

이와 함께, 국민국가체제의 또 다른 특징으로 들 수 있는 것이 포섭과 배제의 구조이다. 대다수 근대국민국가는 그 기원에서부터 구성원들의 고유한 역사적, 문화적 정체성을 부인하고 지배적 사회집단의 이해와 정체성에 부합하도록 건설되었다. 민족이 아니라 국가가 근대라는 시기에 국민국가를 창출했다. 일단 한 국가의 영토적 통제 아래 민족이 형성되면, 이들은 역사를 공유하게 되어 사회 문화적 유대도 만들어 간다. 그러나 국민국가에서 내부의 사회, 문화, 영토적 이해가 불균등하게 대표되면, 지배적 사회집단들의 이해나 정체성과 충돌하는 집단들의 이해나 정체성은 포섭되거나 배제되게 된다. 이러한 현상은 공간 단위 또는 층위로서의 국가와 로컬 관계에도 적용된다. 즉, 국가는 국가의 재정운영의 통일성을 위해 조세와 금융부문을 체계화하고, 국내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중앙집중식 행정구조를 구축해 나가면서 로컬을 철저히 중앙의 통제 하에 예속시켰다. 퍼거슨(J. Ferguson)과 굽타(A. Gupta)는 이런 민족국가의 통합과정을 수직성

(verticality)과 포위성(enccompassment)이라는 공간적 이미지로 설명한다(김용규 2008, 44에서 재인용). 근대 민족문화가 결국 민족 내부의 중심적 지배적 문화임을 감안하면, 로컬문화가 근대적 민족문화속으로 동질화되고 통합된다는 것은 로컬문화의 소멸이 아니라 그것의 새로운 재배치를 의미한다. 다시 말해, 중심과 주변의 이분법적 논리에 따라 로컬리티와 로컬문화는 ‘주변’으로 귀속되거나 지방으로 정형화되는 것이다. 여기서 로컬은 “진보에서 나오된 후진성의 장, 도시와 산업적 자본주의 문명의 역동성과 대립되는 시골적 정체성의 장, 보편적·과학적 합리성에 대립되는 특수주의적 문화 영역, 마지막으로 정치적 근대성의 형식인 민족국가의 완전한 실현의 장애”로 인식되고 만다. 즉, 로컬리티는 근대성 속에서 중심과의 대칭적 관계 속에 놓이게 되면서 항상 중심에 미달하는 주변으로 폄하되는 것이다(김용규 2008, 47).

2. 탈근대와 공공공간의 증충화

자본의 초국가적 활동과 IT기술의 획기적 발전은 국민국가의 경계를 넘나드는 다양한 상호관계를 심화시켰고, 이는 글로벌화와 로컬화의 동시 진행이라는 이른바 공간단위의 재영역화를 초래했다. 즉, 주권, 영토, 국민의 삼위일체로 이루어진 국민국가 시스템이 한편으로는 글로벌화의 진행과 함께 그 권력과 기능이 약화 또는 변화되어가고 있을 뿐 아니라, 다른 한편으로는 로컬화의 진행에 따라 국민국가 내부의 지역적인 문제에 대해서도 실질적인 권력독점이 위협받고 있다. 국민국가 단위의 위와 아래에서 진행되는 이러한 변화는 공간이 지닌 규정력 자체에 대한 인식의 변화⁷⁾와 함께 현실적인 공공공간 단

7) 글로벌화는 국민국가라는 지리적 스케일에서 벗어나는 탈영역화를 야기하며, 글로벌적 상호작용의 범위, 강도, 속도의 증가는 로컬과 지구 사이의 연계를 심화시켜 극히 로컬적인 사안이 엄청난 글로벌적 결과를 불러일으킨다. 카스텔(M. Castells) 등에 의해 제시된 유동공간(space of flows)과 장소공간(space of

위들의 존재방식을 변화시켰다. 글로벌화나 로컬화는 우선 국가단위의 경계를 모호하게 하고, 국가의 자율성을 제한하며, 기존에 국가가 가지고 있던 권력을 수많은 로컬, 지역, 글로벌 기관들에 나누어 준다. 이러한 과정은 기존 국민국가의 영토성을 탈영토화 하여, 새로운 복합적 층위로 공공공간을 재영역화 하는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이상봉 2008, 18-19).

이러한 변화의 과정 속에서 국민국가의 장래(강화, 후퇴, 혹은 변환)에 대한 문제가 중요한 쟁점으로 등장했다. 여기에는 근대국가란 원래 특정한 역사적 상황 속에서 생겨난 산물이며 따라서 새로운 상황에서는 다른 대안적인 사회조직 형태에 그 자리를 물려줄 수 있을 것이라는 점도 포함된다. 즉, ‘국가와 사회의 관계를 비롯한 공공공간에 대한 그 동안 논의에서 일종의 준거 틀이 되어 왔던 국민국가가 더 이상 적합한 공공공간으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할 경우 어떤 대안이 있을 수 있는가?’가 논의의 핵심이 된다. 국민국가를 초월한 새로운 권력관계의 출현에 주목하여 앞으로는 권력이론이 국가이론을 대체하게 될 것이라는 최근의 논의는 이러한 흐름을 잘 반영하고 있다. 새로운 권력관계에서 작동하는 권력블록은 이제 단일체가 아니며 국가적 공간에 의해 제약되지도 않는다. 기존의 지방권력의 존재방식에 있어서 지방의 권력관계와 국가적 층위에서 제도화된 중앙권력이 중첩되어 나타났던 것과 같은 방식으로, 글로벌 네트워크 속에 열려진 국민국가의 권력은 이제 사회의 특정한 권력블록을 나타내면서 동시에 글로벌 권력블록의 이해관계와 논리에도 종속되거나 영향을 받는다.⁸⁾

이처럼 새로운 공공공간의 존재방식은 중층성과 다원성을 특징으로 하며, 국민국가는 이제 그 가운데 하나일 뿐이다. 국민국가의 핵심

places)은 이러한 변화를 잘 설명하고 있다(Castells 1996, 423-428).

8) 무력한 국민국가를 초월한 새로운 권력관계들은 특정한 정체성에 기반하여 지구적 차원의 도구적 네트워크를 통제할 수 있는 역량으로 이해되거나, 또는 지구적 네트워크의 관점에서 초국가적인 도구적 목표에 그 어떤 정체성도 굴복시킬 수 있는 역량으로 보아야 한다(Castells 1997, 305).

기능은 초국가적 및 국가 하위의 통치 기체에 정당성을 부여하고 그 책임성을 보장하는 것이 될 것이다. 국민국가는 의사결정 능력을 보유하고 있지만, 권력과 대항권력으로 구성된 다원적 네트워크의 일부가 되었다. 국가는 혼자서는 무력하기 그지없으며, 다수의 원천들에서 기인하는 법적 집행력을 가진 권위와 영향력으로 구성된 좀 더 광범위한 체계에 의존한다(Castells 1997, 304). 이처럼 글로벌화와 로컬화에 진행에 따른 공공공간 재영역화의 의미는, 국민국가의 종언이나 약화를 초래한다고 단순히 규정되기보다는, 점차 중층화·다원화되고 있는 공간구조에 대응하여 재편성되는 과정에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새롭게 편성되어지고 있는 공공공간은 이전과는 다른 속성을 지닐 것이다. 새로운 공공공간은 끊임없이 변화하는 다양한 변수들을 고정적인 정체성의 공간 안에 가두어버리는 국민국가체제와는 달리, 문화적 차이를 승인하면서도 그것의 정치적 함의를 무력화시키거나 관리하려고 할 것이다. 즉, 문화와 정치 및 경제를 분할하고, 문화에는 잡종적인 차이와 그 정체성을 허용하면서도, 정치에 대해서는 일원적이고 법적인 세계표준을 강요하는 것이 그것이다(강·요시미 2004, 55).

로컬의 입장에서 공공공간의 재영역화를 바라보면, 이는 특정 로컬 내에서의 흐름과 네트워크가 강화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국가의 역할축소와 함께 새로운 공공공간으로서의 로컬의 역할이 강화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강상중과 요시미 순야에 따르면, 경합하는 중층적 공공공간은 4가지 차원, 즉 횡으로 네오 내셔널리즘(단일성)과 차이를 포함한 네트워크(다양성)의 축과, 종으로 전 지구적 통치(글로벌)와 장소에 뿌리내린 운동(로컬)의 축으로 나누어진다(강·요시미 2004, 71). 오늘날 로컬적인 공공공간과 글로벌적 공공공간의 동시적인 세력 확대는 그 중간에 있는 국가적 공공공간의 약화에 대한 위와 아래로부터의 반응이라 할 수 있다. 글로벌공간은 국민 혹은 로컬공간의 통합을 강제하기도 하고, 그것을 내부에서 무너뜨리기도 할 것이며, 국가공간은 다양한 로컬공간을 더 이상 내부에 가두어 둘 수

없을 것이다. 나아가 로컬공간은 국가공간을 뛰어 넘어 직접 글로벌 공간에 접속되어 갈 것이다. 예를 들어 도시는 초국가적 네트워크 안에서 점점 더 여러 개의 상이한 공간이 충돌하고 상호 침투하며 균열을 일으키기도 하는 혼종의 공간이 될 것이다. 이제까지 국가 공간의 관점에서 주변이나 특수로 파악되었던, 로컬공간이 가진 보편성과 특수성을 다시 바라보게 하는 것이 공공공간 재영역화의 중요한 의미 가운데 하나이다. 글로벌화의 강력한 파고에 의해 국가의 규정력이 약화되면서, 로컬은 자신을 옥죄던 국가중심성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글로벌 자본의 직접적 침투가 로컬을 더욱 유린할 가능성 또한 매우 크다. 이러한 글로벌화의 폭력에도 대항하기 위해서는, 로컬이 세계적 네트워크 체제의 기본단위(node)가 되는 개방적인 네트워크 체제, 즉 트랜스 로컬리티의 가능성이 모색될 필요가 있다. 로컬이 중심이 되어 월경적인 교류의 중층적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그 분권화를 국가가 뒷받침하는 동시에 국가주권을 상호 공유하는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는 것이다.

III. 분권과 참여의 공간

1. 대의제 민주주의의 한계

근대의 정치원리로서의 민주주의는 국민국가라는 공공공간을 주된 단위로 한 대의제 민주주의의 형태로 작동하고 있다. 따라서 참여의 부재 또는 대표의 불균등성에 따른 정당성이나 대표성의 문제는 국민국가의 주권성과 기능에 대한 위기이면서 동시에 민주주의의 위기로 여겨져 다양한 형태의 대안적 민주주의가 제기되고 있다. 민주주의에서 주권자인 국민이 정치에 참여하는 방식은 매우 중요하다. 근대 국민국가의 형성과정에서 정착된 대의제 민주주의는 선거를 통해 선출된 대표자에 의해 권력이 행사되는 간접민주주의의 방식을 취한

다. 여기에는, 민주주의의 원리인 인민주권의 실현을 위해서는 직접 민주주의가 바람직하지만, 규모, 운영방법 등 현실적인 문제점으로 인해 대의제가 불가피하다는 점이 작용하였다.⁹⁾

하지만 그 형성과정에 주목할 경우, 대의제 민주주의의 성립에는 단순히 규모나 운영의 문제만이 아니라 근대의 기획에 관철된 사유 체계, 즉 주체와 타자를 이분법적으로 분리하여 이성의 이름으로 타자를 대변하고 계몽한다는 정치적 원리가 작동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대의제의 형성에는 영토의 광대함과 거대인구라는 물리적 이유만이 아니라, 근대 자본주의의 특징인 노동 분업에 따른 정치(공적영역)와 경제(사적영역)의 분리라는 점도 작용하였다. 이와 관련해 시에예스(E. Sieyès)는 “사회적 국가의 공통된 이익과 조건은 통치를 하나의 특수한 직업으로 만들 것을 요구한다.”고 주장하면서 아무리 좁은 국가에서조차 정치적 결합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가장 좋은 수단은 ‘대의제 헌법’이라고 결론짓고 있으며, 밀(J. S. Mill)은 계몽된 소수가 다수에 책무를 갖는 대의제를 주창하면서, 의원들이 유권자들로부터 구분되는 특징은 심사숙고 할 여유를 갖고 정책결정에 필요한 전문정보를 수집하는 전문적인 역할에 있다고 보았다(홍태영 2002, 186/주·정 2006, 14).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대의제는 프랑스 혁명 이후 공화정과 제정을 오가면서, 이른바 ‘이성’과 ‘수’의 갈등 속에서 제도화되었다. ‘이성’에 의해 표상되는 자유주의와 ‘수’에 의해 표상된 인민주권 원리의 충돌은 제한선거권과 보통선거권이라는 정치적 쟁점을 통해 표출되었으며, 정치체제와 관련해서는 입헌군주제와 공화국의 대립으로 현실화되었다. ‘이성’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이성에 의한 통치를 실현하고자 했던 계몽주의자들은 통제하기 힘든 개인들의 의지에 권력

9) 이와 관련해 베버는 직접민주주의가 규모와 관료제라는 해결하기 힘든 문제 때문에 근대사회의 조건 위에서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다(터너 2005, 308). 또한 고대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하는 민주주의가 구성원 전체가 회합해서 토의할 수 있는 소규모 단위에서 가능하다고 본 것 역시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주·정 2006, 32).

을 내맡겨 둘 수 없었던 것이다. 여기서 대의제의 원리는 주권자인 인민의 다양한 견해들을 어떻게 국가권력으로 대표할 것인가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이성을 바탕으로 한 국가권력이 인민들을 계몽하면서 사회를 조직해 가야 하는 원리로 전환된다(홍태영 2002, 121-122). 이성의 강조, 즉 이성에 의한 계몽을 강조하는 자유주의가 정치적 평등과 인민주권의 원칙에 위배된다면, 수의 강조, 즉 계몽되지 않는 대중에 의한 민주주의는 전체주의로 이어져 오히려 자유를 억압할 수 있다는 딜레마적인 상황을 경험하면서, 대의제 민주주의는 근대를 대표하는 정치원리로 자리매김하게 된다.

이처럼 대의제 민주주의는 보통선거를 바탕으로 한 ‘수에 의한 민주주의’, 즉 공화정을 실현하는 기제로 만들어졌지만, 그 이면에는 이른바 ‘은폐된 인두세’를 통해 피지배 대중을 주변화 시키고 있으며, 사실상은 주권자인 국민의 실질적 정치참여가 없는 소수의 정치가에 의한 정치를 정당화하는 논리로 작동하고 있다. 현실에서 나타난 대의제 민주주의는 정치참여를 주로 선거에서의 투표 참여로 국한시켜 이해했으며, 이 경우 정치참여는 대의정부 구성을 위한 메커니즘에 지나지 않는다. 게다가 보통선거 실시에 대한 요구를 중심으로 정치참여에 대한 욕구가 분출하던 20세기 초를 지나, 이러한 선거를 통한 정치참여마저 현저히 줄어드는 이른바 ‘탈정치화’의 상황을 맞이하게 되면, 대의제 민주주의는 그 정당성과 기능의 측면에서 심각한 위기에 직면하게 된다.

따라서 ‘현존하는 민주주의’, 즉 국민국가와 결합한 대의제 민주주의를 전제로 한 다양한 대안적 민주주의의 형태들이 제시되게 되는데, 그 가운데 대표적이라 할 수 있는 것이 참여(풀뿌리)민주주의, 결사민주주의, 심의민주주의 등이다. 이러한 논의들은 말 그대로 각기 대의제 민주주의가 노정한 결함, 즉 참여부재와 불균등, 형식적 절차주의라는 현상에서 그 대안의 단초를 찾으려고 하고 있다.

국가단위의 대의제 민주주의가 드러내는 한계는 대의제라는 대표방식과 국가라는 정치단위의 문제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우선 대

표방식, 즉 누구에 의해 무엇을 대표할 것인가라는 문제와 관련하여, 정치가 이루어지는 공공공간을 국가에 의한 공적(서비스)영역으로 좁혀가면서 정당 등 제도적 장치에 의한 대표에 치중했던 대의제의 대표방식은, 1960년대 후반 이후 서유럽에서 활발히 전개된 이른바 ‘신사회운동’이 제기한 환경, 젠더 등의 다양한 일상의 쟁점이 표출되자, 이들 쟁점을 정치영역으로 받아들이는데 성공하지 못했다. 이처럼 정치공간에서의 쟁점과 일상의 쟁점이 괴리되면서, 정치공간은 소수의 엘리트에 의해 지배되었고 이로 인해 대표되지 못하고 소외되는 사람들이 증가되고 다른 한편으로는 대표 원리를 통해 사회적 갈등을 조정·통합한다는 정치의 제1차적인 기능수행 역시 어려워지는 상황이 발생한다. 이러한 기능저하는 국가라는 정치공동체 단위가 지닌 통합력에도 균열을 일으키고 있다. 앞서 살펴본 바대로 국가공간은 이제 중층적인 공공공간들 가운데 하나로 그 위상이 상대화되고 있다. 토플러가 주장한 바와 같이, 종래 공공공간의 기본 단위였던 국가는 지역의 특수성 때문에 중앙정부가 다루기 힘든 문제를 지방중심의 공동체로 그 권한을 이양하고, 국가단위에서 감당하기 힘든 큰 문제들은 국제규모의 조직에 그 해결을 이관하는 추세의 강화에 의해 그 권력이 위축되게 된다(Toffler 1980, 349). 기존의 대의제 민주주의에 대한 대안적 민주주의를 모색함에 있어 이러한 공간단위의 변화를 감안하지 않는다면, 그 대안은 국가단위 대의제 민주주의의 연명을 위한 미봉책의 대안에 거치거나, 아니면 현실성을 결여한 담론 차원의 급진적인 제안에 머무를 가능성이 크다.

2. 대안적 민주주의와 로컬공간

우선, 유력한 대안적 민주주의의 하나인 참여 민주주의에 대해 살펴보자. 현실 정치에서 지방분권화와 함께 다양한 형태의 참여 민주주의가 대두하게 된 것은 대의제 민주주의가 시민의 정치적 참여와

인민주권의 원리를 제대로 실현하지 못했다는 비판에서 비롯된다. 1960년대 신좌파 운동으로부터 본격화되기 시작한 현대적 참여민주주의 이론은 자유주의에 대한 마르크스주의적 비판에 기초하여 참여민주주의 형태를 탐색하기 시작한 맥퍼슨에서 출발하여, 1970년대의 페이트만, 다알, 클레이머, 1980년대의 바버와 골드 그리고 1990년대의 바하라하와 보트위닉을 거치면서 이론적 정교화의 과정을 거쳤다(김비환 2005, 178). 이들의 참여민주주의 이론은 직장, 학교, 행정, 환경 등 다양한 삶의 영역에서 분출하고 있던 집단적 불만과 소외감의 해소 기체로서의 ‘참여’에 주목하여, 참여를 단순히 대의정부 구성을 위한 메커니즘으로 국한시켜 이해했던 대의제 민주주의 이론에 중대한 도전을 가했다.

그것이 국가단위의 대의제 민주주의가 드러낸 결함을 기능적으로 보완하기 위한 것이든,¹⁰⁾ 아니면 행위주체 또는 사회적 존재로서의 개인의 본질에 근거한 존재론적 추론의 결과이든,¹¹⁾ 참여 민주주의는 규모 또는 단위의 측면에서 로컬공간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 우선, 참여에 필요한 덕성 있는 시민은 로컬단위에서 양성되어야 한다는 논의가 있다. 지역사회의 당면문제에 대한 참여는 교육적 효과가 뛰어나기 때문에, 국가단위 정치에의 참여를 최종 목표로 삼는 논의에서도, 참여에 필요한 자질들은 로컬수준에서 먼저 계발될 필요가 있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다. 로컬수준에서 자신의 삶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일상의 문제들의 해결에 직접 참여할 기회를 가지게 되면 그 학습효과가 좀 더 큰 단위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콜(G. D. H. Cole)은 “개인들이 근대정치의 거대한 메커니즘을 통제할 수 없는 이유는 사회가 너무 거대해서라기보다는 더 작은 단위 결사에서 자치의 기본 원리들을 배울 기회가 없었기 때문”이라고

10) 밑은 지역수준에서의 참여를 통하지 않고서는 국가수준에서의 보통선거권과 정치참여는 별로 의미가 없다고 지적한다(김비환 2005, 164).

11) 참여 민주주의자들은 참여 민주주의의 사상적 원천을 주로 공화주의에서 찾고자 한다(김비환 2005, 204-206).

본다.¹²⁾

로컬을 참여민주주의를 위한 교육의 장으로 보는 논의와는 별도로, 참여민주주의의 장으로서의 로컬공간의 적극적인 의미는 새로운 공공영역, 즉 민주적 공론장의 창출과 관련되어 있다. 참여와 토의가 이루어지는 공론장으로서의 공공영역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서는 잠깐 하버마스(J. Habermas)의 주장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하버마스에 따르면, 근대 초에 출현한 ‘부르주아 공공영역’은 계몽사상의 이성에 대한 신뢰에 기반한 것으로, 일반적인 정치적 관심사항이 논쟁되는 열린 공간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공공영역에 시장과 상품관계가 침투하면서 ‘이성’은 ‘소비’로 변형되게 되고, 그 결과 공공영역은 기술적 정보와 상대적 역학관계에서 우위에 있는 기업과 관료와 같은 대규모 조직에 의해 조작되게 된다. 공공영역을 조작의 공간으로 바꾸어버리는 이러한 왜곡에 대하여, 『공공성의 구조전환(1961)』에서 아직 고갈되지 않은 ‘비판적 공개성’의 잠재력을 발굴하여 그것을 ‘조작적 공개성’이라는 추세에 대항시킨다는 처방을 내린 하버마스는, 『사실성과 타당성(1992)』에 와서 거대 조직인 행정 시스템과 경제시스템으로부터 상대적인 자율성을 유지하는 ‘자율적 공공권(시민포럼, 시민운동, 자원봉사단체 등)’을 중시하는 대안을 제시한다.¹³⁾ 공공영역의 이상적 형태를 합의의 형성해가기 위한 토의의 공간으로 파악하는 하버마스는 초기의 ‘부르주아 공공권’에 대한 주목에서 나중에 ‘자율적 공공권’의 강조로 그 중점을 전환하였지만, 국가라는 단위와 이성중심주의의 연장이라는 한계를 넘어서지는 않는다. 여기서 하버마스가 말하는 부르주아 공공영역은 절대주의 공권력과 교회와 같은 문화적 권위에 대항하면서 나타났지만, 그 이면에 로컬이나 하층민과 같은 보다 열

12) (김비환 2005, 186)에서 재인용.

13) 정치적 공공성을 담당하는 것은 이미 조직화된 집단의 구성원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결사에 모인 모든 개인이라는 하버마스의 전환은, 이성을 공공적으로 사용하기에는 지나치게 두터워진 조직에 대한 재인식과 함께, 1960년대 말 이후 진행된 대항문화 및 신사회운동에 대해 인식하게 되었기 때문이다.(사이토 2009, 52) 참조.

등한 공공영역을 억압하고 배제하는 등질적인 공간으로 상정되고 있다. 따라서 이성과 합의를 강조하는 하버마스의 주장은 다양성과 차이를 억압한다는 점에서 리오타르와 같은 포스트모던 이론가들의 줄기찬 비판의 대상이 된다. 이들은 ‘공약 가능한 것’의 형성을 강조하는 하버마스의 주장에 대해 ‘공약 불가능한 것’의 창출과 발견을 주장하면서, 제도적인 의사소통의 양식에서 벗어나 맥락에 따른 복수의 양식(토의, 수사, 이야기, 인사말 등)에 대해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역설한다(사이토 2009, 57).

하버마스의 논의가 기존의 국가단위의 틀 내에서 ‘합리적 의사소통 방식’을 추구함으로써 대의제 민주주의의 당면위기에 대응하고자 한다면, 한편에서는 통합유럽이나 국제레짐과 같은 트랜스내셔널한 공동체에서 그 대안을 찾는 시도도 있으며, 또 다른 한편에서는 로컬차원의 데모스를 창조 또는 부흥함으로써 위기에 빠진 민주주의를 구하려는 논자도 있다. 그리고 기존의 제도적 장치 속에서 정치공동체의 단위나 주체의 변화를 통해 위기에 대응하는 이 같은 입장과 달리, 위기를 새로운 기회로 삼아 제도화된 공공영역이 아닌 비제도적 시민사회에 주목하여 이를 ‘하위(sub) 정치’(Beck 1997, 94-109)나, ‘민주주의의 제2의 회로’(篠原 2004, 108)라는 새로운 영역으로 제시하려는 시도들도 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정치가 이루어지는 공공영역을 이성과 제도에 의해 작동되는 의사결정과정으로 제약해 온 대의제 민주주의와는 달리, 로컬공간은 일상생활에서 드러난 모순과 갈등을 주민 스스로 해결하려는 ‘실질적 참여’를 지향한다는 점이다. 로컬단위의 공간시스템은 국가단위의 관리 시스템이 지닌 한계, 즉 시스템의 거대화과 불투명화, 지나친 전문화와 규제, 주민의 관여를 억제하려는 경향을 극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공통의 문제를 처리하기 위한 최적의 시스템으로 기능한다. 신변의 문제를 적은 노력으로 정치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장을 가지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로컬공간은 그 공간에 함께 거주함으로써 발생하는 다양한 공통문제 처리를 위한 시스템을 중요한 구성요소로 하여 성립한다. 로컬공간을 사

람들이 태어나서 성장하는 현장으로 본다면 육아나 교육, 돌봄(care) 등은 매우 중요한 공공의 문제이다(森岡 2008, 57).

인간주체에 있어 제1차적인 공공공간은 ‘생명의 보장’을 위한 다양한 활동이 타자와의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공간이다. 거기에는 의·식·주와 관계된 활동은 물론이고, 낳고, 기르고, 늙고, 병들고, 죽는 것에 관계된 모든 활동도 포함된다(사이토 2009, 115). 중층적 공간단위로서의 로컬공간은 이에 부합하는 공간이다. 나아가 인간주체에게는 이 같은 생명의 보장과는 다른 위상도 있다. 그 하나는 ‘주체가 타자와 공유하는 세계’에 관련되는 것이다. 그것에 대응하는 공공성의 차원은 공통의 세계가 어떠해야 하는가를 둘러싼 의견, 특히 규범의 타당성(정의)에 대한 판단을 서로 교환하는 의사소통이다. 집합적인 의사결정을 회피할 수 없는 이 차원에서는, 당면한 합의를 형성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며, 국가적 공공공간은 이에 부합한다. 더 나아가 주체에게 요구되는 공공성은 이러한 생명의 보장이나 공통의 세계에 대한 규범적 합의만으로 끝나지 않는다. 새로운 가치나 삶의 양식을 표현하는 것과 관계된 ‘미래의 세계에 대한 제시’가 이루어지는 담론의 공공공간이 필요하며,¹⁴⁾ 이는 국가공간을 넘어서는 새로운 공공공간의 창출과 부합한다. 대안적 공공공간이란 기존의 국가적 공공공간을 대체할 그 무언가라기보다는 중층화 하는 공공공간의 변환 속에서 각 층위간의 새로운 자리매김과 관계 맺기로 보아야 한다.

IV. 생활정치와 거버넌스의 공간

1. 생활정치와 풀뿌리 민주주의

14) 그것은 ‘윤리로서의 정치’라고 할 만한 요소도 포함할 것이다. 이는 푸코가 ‘도덕 규범’과 대비되는 의미에서 ‘윤리(존재의 기술이라고 부른다)’라고 부르는 것이다(사이토 2009, 117).

앞서 살펴본 공공공간의 ‘단위’와 밀접하게 관련되면서, 주체와 운영원리 측면에서의 새로운 대안적 정치원리를 창출하고자 하는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¹⁵⁾ 바로 ‘생활(일상)정치’와 ‘거버넌스’에 대한 관심이 그것이다.

앞서 간략하게 언급한 바 있지만, 근대성의 부정적인 결과에 대한 성찰과 함께 다양한 사회적 요구가 분출되면서, 대의제 민주주의에 바탕을 둔 국가의 기능은 크게 약화되었다. 즉, 다원화된 정체성들을 바탕으로 시민사회가 중심이 되어 국민국가에 대해 새로운 요구들을 계속 던지지만, 국민국가는 이러한 요구들에 대해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무기력해지게 된다.¹⁶⁾ 이러한 위기상황에 직면한 국민국가가 대응하는 방식 가운데 하나가 국가권력의 일부를 로컬에 나누어 주는 이른바 분권화이다. 정치가 일상생활로부터 유리되면서 발생한 참여의 부재와 그에 따른 정당성의 위기를 해소하기 위해, 일상생활의 문제를 관리하는 책임을 로컬 단위에서 맡도록 허용한다는 의미이다. 그러나 일단 권력의 분권화가 진행된다면, 로컬정부는 자신의 주민과 지역에 관계된 문제들에 대해 주도권을 장악할 수 있고, 나아가 국민국가를 넘어 글로벌 시스템의 변화에 대응한 발전전략을 직접 추구하게 되면서 자신들의 모체였던 국민국가와 경쟁하는 상황에도 이르게 된다.

이처럼 분권화나 참여 민주주의는 국가권력이나 대의제 민주주의의 기능 약화에 대한 보완의 의미로 진행된 측면이 적지 않다. 하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참여와 분권을 기존의 대의제 국민국가체제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적 정치원리로 인식하려는 경향이 나타나며, 그

15) 달마이어는 근대적 대표성 원리의 제약성을 탈피할 수 있는 보완책으로 실질적 참여의 기초가 되는 공공영역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홍원표 1997, 23) 또한 이와 관련하여, 페이트만(Pateman)은 ‘정치적인 것(the political)’을 국가정부 및 지역정부에 국한시키지 않고, 생활의 일상수준까지-최소한 그 가능성에 있어서-확대시킴으로써 인간의 일상생활과 정치를 결합시켜줄 수 있는 참여민주주의 정치이론을 제시하고 있다(김비환 2005, 191-194).

16) 이러한 상황을 하버마스는 ‘정당성 위기’라고 불렀고, 리처드 세넬트는 민주주의 시민권의 초석인 ‘공인(public man)의 몰락’이라고 불렀다(Castells 1997, 271).

구체적인 형태의 하나가 풀뿌리 민주주의이다. 풀뿌리 민주주의 역시 분권을 주장하지만, 그것은 실현을 위한 전제일 뿐 궁극적으로는 대의제 민주주의의 극복을 과제로 삼는다. 지금 당장 현실의 대의제 민주주의를 완전히 대체하기 보다는 적어도 또 하나의 대안적인 질서를 지향한다는 의미에서 그러하다. 풀뿌리 민주주의에서는 대의제 민주주의에서 배제되거나 소외되었던 서벌턴이나 생활인이 자기 목소리를 주장하며 정치의 주체로 등장한다. 이들은 자신들의 발언권을 상실해 했던 기존의 제도적 정치공간과는 다른 생활공간을 새로운 공공공간으로 만들어나간다. 풀뿌리민주주의는 생활(자)정치, 즉 매일 매일의 일상에서 드러나는 모순과 갈등을 생활자로서의 시민 스스로가 해결해나가면서, 이를 통해 그 존재성을 회복하려는 포괄적인 삶의 정치인 것이다. 여기서 생활자 시민이라는 말에는 자신의 문제를 자신의 생활과 분리된 외부의 장치에 의존해 해결하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살고 있는 일상생활의 장에서 이루어지는 실천 활동을 통해 해결하려는 의지가 포함되어 있다(요코다 2004, 104). 이처럼 풀뿌리민주주의는 정치와 경제, 사회라는 영역을 따로따로 구분하지 않고 총체적인 삶의 변화를 지향하며, 제도화된 틀만이 아니라 그 틀로 제한되지 않는 운동의 정치를 강조한다는 점에서, 주민발안이나 주민투표와 같은 대의제 민주주의에 기반 한 참여민주주의와는 차이가 있다.

이처럼 생활정치로서의 로컬공간의 의미를 고려할 경우, 친밀권(親密圈) 개념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공공성에 관한 선도적인 연구자인 아렌트(H. Arendt)는 친밀권을 ‘사회적인 것’의 위력, 그 획일주의의 힘에 저항하기 위한 공간, 즉 잃어버린 공공적 공간의 ‘대상(代償)공간’으로 파악한다. 공공권이 사람들 ‘사이’에 존재하는 공통의 문제에 대한 관심에 의해 성립하는 데 반해, 친밀권은 구체적인 타자의 삶이나 생명에 대한 배려에 의해 형성·유지된다는 점에서 본질적으로 차이가 난다. 하지만 친밀권은 새로운 공공권 창출의 계기가 될 수 있다. 1990년대 후반부터 각지의 로컬공간에서 일어나고 있는 풀

뿌리 민주주의를 위한 실천들은 그 대부분은 주민들 사이의 ‘대화의 친밀성’에서부터 시작된 것이다. 친밀권의 공공성은 기존의 문화적 코드를 재생산하기 십상인 ‘시민적 공공성’의 의사소통으로부터 구별된다. 타자에 대한 완전한 이해를 포기하는 것, 타자가 타자로서 존재하는 것을 긍정하는 것, 관심을 기울이면서도 일정한 거리를 두는 것, 친밀권은 그러한 타자와의 느슨한 관계의 지속도 가능하게 한다(사이토 2009, 110).

체제 또는 제도에 대비되는 의미에서의 일상에 주목하려는 풀뿌리 민주주의의 경향은 포스트모더니즘의 흐름과 상통한다. 혁명적 정치에서 생활의 정치로, 노동과 생산의 담론에서 여가와 소비의 담론으로, 정치담론에서 문화담론으로의 전환을 지향하는 포스트모던적 질서는 체계의 메커니즘에 의해 식민화된 생활세계의 복권에 중요한 의미를 부여한다. 현대사회의 권력현상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권력을 중앙집권적 국가권력으로 규정하기보다 사회의 풀뿌리 수준에서 작용하는 힘의 관계로 개념화 하고, 이와 같은 로컬공간에서 작용하는 권력과 저항의 역학관계, 특히 시민의 일상적인 행동양식과 태도, 그들의 행위, 그들의 신체에 작용하는 권력의 전술과 전략에 분석의 초점을 두어야 한다는 것이다.¹⁷⁾ 근대적 의미의 정치영역, 즉 공적영역과 사적영역의 엄격한 분리에 기반 한 공적영역으로서의 정치는 현대사회의 다양한 문제들을 제대로 담아내지 못한다. 현대사회를 살고 있는 사람들의 집합적 행위의 대부분은 일상의 경험과 관계된 것이라는 점에서는 정치 이전의 문제이며, 기존의 정치적 틀로 담아낼 수 없다는 점에서는 정치를 넘어선(meta-political) 문제이다. 따라서 정치적 영역이나 정치의 위상변화를 통해 이러한 문제들을 담아내야 한다. 즉, 일상적인 영역과 미시정치의 영역으로 정치적인 영역을 확

17) 이는 푸코가 말하는 ‘미시권력’과 상통하며, 국가는 일련의 권력관계의 그물망 위에 존재하는 상부구조이며, 실제로 인간의 육체를 규제하는 것은 사회 전체에 퍼져 있는 섬세한 권력의 그물망일 뿐이다. 여기서 생활세계는 국가와 자본이라는 수직적인 거대권력과 개인에게 수평적으로 작용하는 다양한 일상적 권력이 교차하는 공간이다(오재환 1996, 98).

산시켜가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제임슨(F. Jameson)은, 포스트모던적 현상 가운데 가장 의미심장한 것 가운데 하나가 다양한 소집단적, 비계급적, 정치적 실천 행위와 같은 ‘미시정치의 등장’이라고 주장한다.¹⁸⁾ 또한 ‘미시정치’는 이른바 ‘문화정치’에 주목한다. 문화는 예술적, 시적 표현과 같이 일상생활의 모든 실천들에 내면화되어 있으므로 거시정치에서의 국가, 계급, 이익집단과 같은 개념적 매개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대신 끊임없이 변화하면서 균형적인 관계를 만들어내는 관계망, 즉 ‘차이와 동일성’, ‘사적영역과 공적영역’, ‘시민사회와 국가’ 등의 이항적 대립관계를 넘어서 작동하는 다차원적 관계망에 주목한다(이성화 1994, 347).

참여를 기반으로 한 생활정치가 대안적 정치의 장을 여는 가능성을 가진다면, 이러한 생활정치가 이루어지는 일차적인 토대는 로컬공간에서 이루어지는 자치에서 찾을 수 있다. 일반적으로 공동체의 규모가 커질수록 참여를 통한 정치과정에 장애가 될 수 있다.¹⁹⁾ 즉, 총회를 통한 의사결정의 범위를 넘게 되어 대의원을 선출하는 순간, 그 대의원들은 풀뿌리와 분리된 대표자들로 전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브라질 뽀르뚜알레그리의 ‘참여예산제’나 일본 가나가와 네트의 ‘대리인 운동’ 등 대표적인 풀뿌리 정치운동의 주창자들은 대의원을 선출된 공직자라는 고전적인 의미의 대표자가 아니라 주민의 감시와 통제를 받는 대리인에 불과한 것으로 규정함으로써 대의제와 참여제의 상호모순을 해결하려 하고 있다. 주침²⁰⁾을 통한 대의원 선정이나 기

18) 하지만 제임슨은 신사회운동의 등장이 계급이나 계급갈등의 소멸을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본다. 그는 신사회운동이 체제 자체가 만들어 낸 체제의 새로운 단위인가? 아니면 체제에 저항할 새로운 역사의 대리인인가? 라는 질문을 던지면서, 신사회운동과 같은 부분적이고 제한된 운동을 통해 적극적인 정치 참여를 하면서 동시에 총체적이고 체계적인 사회이론을 지속적으로 개발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기 때문에 둘 중 하나를 선택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홀 2000, 295-297).

19) 뽀르뚜알레그리에서의 경험에 의하면, 5만 명 이하의 주민이 사는 지구(地區)의 참여율이 5만 명에서 15만 명의 주민이 사는 지구들보다 4배 더 높게 나타난다(그레·생포메 2005, 128).

간 제한²¹⁾ 등은 그 구체적인 방법의 하나이며, 그것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쟁점의 공유와 대표하는 자와 대표되는 자 간의 인접성이 요구된다. 이점에서 보면, 로컬공간에서 이루어지는 정치는 국가공간과는 달리 생활의 영역과 정치적 대표 사이의 직접적인 연계가 존재한다. 선출된 관리들은 누가 누군지 알려져 있으며 인격적 기반에 근거하여 통제될 수 있다. 또한 생활세계는 관리보다는 자치가 중요한 문제가 되며, 따라서 집권이 아니라 결정권을 분산시키는 분권이 중요한 문제가 된다. 분권은 참가의 기회를 확대시키며, 참가기회는 자치능력을 키우기 때문이다.

2. 로컬 거버넌스

기존의 국가중심의 대의 민주주의 틀 내에서 이루어진 지방정치는 중앙정치와 마찬가지로의 통치방식, 즉 선출직 관리자와 시민 일반간의 선거를 통한 정치적 연대에 의해 작동하였다. 하지만 주체와 쟁점영역에 있어서의 대안추구는 새로운 공동체 운영원리의 모색으로 이어진다. 즉, 전통적인 지방정치에서 정부와 주민간의 정치적 합의를 기초로 한 거시적 통치구조가 중요했다면, 이른바 ‘로컬 거버넌스’의 지방정치에서는 분야별로 인력, 노하우, 자본, 기술, 서비스 등을 동원하고 조정하는 파편화된 미시적 통치구조가 중요해진다(조명래 2002, 219). 앞서 살펴본 공공공간의 재영역화와 관련해 보자면, 글로벌화는 로컬이라는 공공공간의 상대적 위상뿐만 아니라 그 통치방식과 계급

20) 추천은 대중들의 회의체와 더불어 아테네식 직접민주주의의 제2의 기둥이다. 고대 아테네에서는 필요한 7백 개의 직무 중에서 약 6백 개가 추천으로 충원되었으며, 당시 이러한 방식은 선거보다 더 민주적이라고 간주되었다. 마리옹 그레와 이브 생또메는 추천방식으로 상원의원을 임명한다면 엘리트에 의한 배타적 대표성 독점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한다.(그레·생또메 2005, 203)

21) 일본의 ‘가나가와 네트’는 의원직이 특권화 하는 것을 막기 위해 의원 임기를 2기(8년)으로 제한하고 있다. 2003년 현재 가나가와 네트 소속 지방의원 수는 현(縣)의회를 포함해 16개 자치단체 28개 선거구에 44명이 있다.(요코다 2004, 180-187)

적 성향에도 심대한 변화를 초래하며, 그 변화는 거버넌스라는 새로운 통치방식(운영원리)을 매개로 나타나는 것이다.

거버넌스의 원리는 사회체계를 거시적으로 구성하는 국가의 방식과 시장의 방식, 지구적인 방식과 지방적인 방식, 전체적인 방식과 개별적인 방식을 통합하면서 미시적으로는 다자간 조정 협력의 파트너십을 달성하는 방식을 주로 활용한다. 이 같은 원리에 기반 한 거버넌스는 국가와 사회 간의 분리를 바탕으로 하던 기존의 국가주도적 체계를 허물고, 국가, 시장, 시민사회 전 영역의 행위자들이 수평적으로 결합하면서 상호 조율하는 네트워크 체계를 만들어 내는 데 중요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 거버넌스에서는, 기존의 국가 또는 시장 주도적 통치체제와 대비되는 의미에서, 시민사회영역이 상대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지니며, 특히, 푸트남(R. D. Putnam) 등에 의해 ‘사회적 자본’이라는 용어로 개념화된 지역사회의 사회제도적 인프라가 강조된다. 사회적 자본이란 신뢰와 호의적 연대의 창출 네트워크와 같은 제도적 하부구조를 의미하며, 인적 물리적 하부구조에 대한 투자를 보완하고 전통적인 지역사회에 기반 한 자원을 동원할 수 있도록 한다. 새로운 ‘지역르네상스’를 불러오고 있는 사회적 자본은 지역에 기초한 행동 관습과 규칙, 나아가 좀 더 일단의 제도들을 포괄하는 지역 특정적 자산으로 간주된다. 이러한 점에서 사회적 자본은 “지역 수준에서 가장 잘 발달할 수 있다. 왜냐하면 규칙적인 신뢰 형성이 시간 경과에 따라서도 지속될 수 있는 수준이기 때문이다.”²²⁾

펑(A. Fung)과 라이트(E. O. Wright)는 거버넌스의 구조와 프로세스의 다양성을 설명하면서, 기존의 톱-다운형 정치구조에서 참가형구조로, 그리고 적대정치(adversary politics)에서 협동정치의 프로세스로의 전환이 필요함을 주장하고, 이를 임파워-참가형 거버넌스(empowered participatory governance)라는 형태로 제시하고 있다 (Fung & Wright 2003, 262). 이들은 여기서, 기존의 국가단위의 대의

22) (Morgan 1997, 501/최병두 2002a, 158에서 재인용).

제 방식, 즉 적대정치와 통치방식에서는 잘 조직된 이익단체나 엘리트가 조직되지 않은 약자나 일반시민에 비해 큰 영향력을 발휘할 수밖에 없으며, 임파워-참가형 거버넌스는 로컬레벨에서 잘 작동한다고 본다. 인파워-참가형의 조직은 로컬적 지식이나 거리 레벨의 실무가 및 관리자를 망라한 문제해결의 촉진자로서의 능력을 필요로 한다. 거버넌스를 외치기는 쉽지만, 참가하는 다양한 주체들, 특히 일반시민이나 조직되지 않은 약자의 실질적 영향력이 확보되지 않으면, 그것은 보여주기 위한, 형식적 합리화를 위한 제도에 그치기 쉽다. 전문지식이 부족한 일반시민이나 조직되지 않은 약자들이 자유롭게 참가하여 심의할 수 있는 일상정치의 영역이야말로 거버넌스의 공간이라 할 것이다.

국가-시장-시민사회 간의 통합적 조절체계로서의 거버넌스는 전지구화와 로컬화의 동시적 전개 속에서 로컬공간의 단위에서부터 국가적, 초국가적 단위 모두에 걸쳐 작동한다는 데 또 다른 특징이 있다.²³⁾ 거버넌스의 이 같은 특징은 글로벌화의 진전에 따라 기존에 국가가 행하던 역할과 기능이 한편으로는 글로벌 차원과 로컬 차원으로 분산(국가의 공동화)되고, 다른 한편으로는 국가 부문에서 비국가(시민사회) 부문으로 수평적으로 확산(탈국가화)되는 변화로 인해, 근대사회를 구성해 왔던 제도적 조절자들 간의 권력관계 전반이 거시적으로 재조직된 데 따른 결과이다. 여기서, 시민사회가 일상의 활동이 전개되는 로컬 공간을 주된 배경으로 한다면 시장은 자본 활동의 글로벌화에 의해 마련된 초국가적 공간을 주된 배경으로 한다. 이점에서 시민사회 영역과 사회적 자본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거버넌스는 로컬공간 친화적이다. 또한 글로벌화의 진전에 의해 국가의 역할이 위축되게 되면 일차적으로 로컬의 시민사회가 그 대안적인 정치의

23) 메타 거버넌스는 범지구적 일상과정을 미시적인 차원에서부터 거시적인 차원을 통합·조정하는 기제들의 전체적인 구성으로 작동한다. 이러한 메타 거버넌스 중에서 지방적 스케일로 작동하는 것이 로컬 거버넌스이며, 이는 지방적 스케일에서 국가-시장-시민사회가 상호 조율되는 메조 거버넌스에 해당한다(조명래 2002, 216).

공간으로 모색되게 된다.

V. 장소성과 저항정체성의 공간

1. 장소성과 혼종성

공공공간의 중층화와 다원화가 진행되고 있는 탈근대적 공간의 변화를 카스텔(M. Castells)은 ‘유동공간(space of flows)’과 ‘장소공간(space of places)’의 개념을 통해 설명한다(Castells 1996, 423-428). 여기서 자본과 기술, 인적자원 등의 국가 간 이동과 교류의 확대를 바탕으로 형성되는 유동공간이 탈영역적인 특징을 가지는데 비해, 장소공간은 특정 장소가 가지는 영역성, 정체성, 고유성을 나타낸다. 탈근대적 공간 변화의 특징은 유동공간을 중심으로 동질성이 확산되면서도, 특정 장소의 고유성이 작용하여 동질성 속의 차이를 만들어 낸다는 것이다. 이러한 두 공간적 논리의 분리는 사회를 지배하는 메커니즘으로 작동한다. 특징적인 것은 오늘날 권력, 부, 정보를 집중시키는 가장 지배적인 과정들은 유동공간을 중심으로 조직되지만, 가장 인간적인 경험과 의미는 여전히 장소 공간, 즉 사회적 의미가 구성될 수 있고 정치적 참여와 통제가 이루어질 수 있는 로컬공간에 기반을 두고 있다는 것이다.

글로벌화의 진전과 함께 유동공간의 확산, 즉 공간의 유동성이 가속화될수록 사람들이 느끼는 공간적 정체성은 일상생활이 이루어지는 로컬공간의 장소를 중심으로 복귀하는 경향 또한 두드러지고 있다. 유동공간이 장소가 지닌 특성들을 포섭하고 동질화 시켜 나가는 반대편에서 로컬공간은 새로운 정체성의 기반으로 새롭게 자리매김되고 있다는 의미이다. 여기서 정체성의 공간으로서의 로컬공간은 국민국가 체제의 하부에 위치하는 단순한 행정적 단위나 공공서비스 공급을 위한 기능적 단위가 아니며, 자율적인 주체들의 삶이 이루어

지는 상대적으로 독립된 자기완결적인 단위(사회구성체)로 인식된다. 국가나 글로벌적 유동공간과 같은 거시적이고 추상적인 공간에서는 체계나 구조의 힘이 크게 작용한다. 이에 비해 일상생활이 이루어지는 미시적이고 구체적인 공간인 로컬공간에서는 개체의 존재가 확인되고 또한 상호 간에 호명이 허용된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탈근대적 공간의 주요 특징을 탈중심화나 탈구조화로 본다면, 로컬공간은 탈근대적 공간으로서의 가능성을 내재하고 있다. 물론 글로벌한 자본과 권력의 강력한 힘에 의해 로컬공간은 또 다시 수동적으로 포섭·배제되어질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점은 부정하기 힘들다. 다만, 여기서 가능성에 주목하는 것은 신자유주의적 글로벌화의 힘이 강력하고 폭력적인 만큼 그 대안을 찾는 노력도 절실하게 요구되어진다는 의미에서이다.

개인의 국민적 정체성이 국가적 경험과 상황 속에서 형성되듯이, 로컬 정체성도 로컬적 경험과 상황을 반영한다. 즉, 일정한 지리적·사회적 공간으로서의 로컬은 거기에 살고 있는 주민들로 하여금 지역을 매개로 사고와 행위에 일정한 경향성을 갖게 하는 이른바 ‘로컬 정체성’을 갖게 한다. 여기서 로컬 정체성이란 특정 로컬의 지리적 입지와 같은 환경적 조건, 역사적 경험이나 전통, 그리고 주민들 간의 사회적 관계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전체적으로 다른 로컬과 대비 또는 경쟁하는 과정에서 만들어진다. 로컬이 상대적으로 자기완결적인 단위가 된다는 의미는, 로컬정체성이 한편으로는 전체(국가 또는 글로벌)와의 관계에서 기능적으로 분화된 특정 로컬의 공간적 특성을 반영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내부적인 계급구조나 권력관계 등 다양한 사회적 관계가 발현된 결과라는 의미이다.

국가공간 또는 국민적 정체성이 포섭과 배제의 메커니즘을 통한 대내적 동일성과 대외적 배타성을 중요한 특징으로 하며 ‘상상의 정체성’으로서의 추상성을 나타낸다면, 로컬공간 또는 로컬 정체성은 구체적인 장소를 기반으로 한 장소성을 잘 드러내며, 국가공간의 폐쇄성과 동일성에 대비되는 개방성과 혼종성의 가능성을 지닌다. 대부분

의 국가들은 이중 혹은 다중시민권을 허용하지 않고, 자국의 성원권을 배타적인 것으로 간주한다. 역사적으로 볼 때, 국민적 정체성은 정치적 공동체의 일원으로 인정받는다는 의미의 시민권(국적)이라는 권리와 연관되어 인식되어져 왔다. 시민권은 보통 출생 시 부여되는 귀속적 자격이라는 점에서 신분관계의 한 형태이고, 시민권을 특정한 혈통에 근거하는 것으로 바라보는 전통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시민권은 민족적 정체감과 동일시되기도 하고, 국민주의라는 ‘상상적 공동체’의 관념과도 결합된다.²⁴⁾

이에 비해 로컬 공간의 성원권인 주민권은 유동적이고 개방적이다. 시민권의 취득에 매우 엄격한 나라들에 있어서도, 같은 지역에 거주함으로써 주어지는 주민권은 대부분 개방되어 있다. 이러한 개방성에도 불구하고 로컬정체성이 그 의미를 지닐 수 있는 것은, 거기에 ‘상상의 공동체’로서의 국민성에 결합되어 있는 장소성과 현장성이 강하게 작동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로컬 정체성의 특징을 문화적 글로벌화 현상과 연결시켜 보면, ‘글로벌적 등질화의 파고 속에서 과연 로컬문화의 정체성이 유지될 수 있을 것인가?’ 라는 문제가 제기된다. 문화적 제국주의론자의 주장에 따르면, 거대 자본과 결합된 외래문화의 강력한 충격이 결국 로컬 고유의 문화를 파괴하고 동화시켜 나갈 것으로 본다. 이러한 주장을 현실적으로 무시하기 힘든 것이 사실이지만, 각각의 로컬이 이에 대응하는 방식, 즉 로컬적인 맥락이 외래의 문화를 토착화시키는 작용을 고려한다면, 다른 결과나 해석도 가능해진다. 오늘날 글로벌하게 이루어지는 문화교류는 종래의 중심/주변 도식이나 생산/소비 도식만으로는 파악할 수 없는, 다양한 차원의 문화가 이접적(disjunctive)으로 중첩되는 혼종성의 장을 형성하고 있다. 문화적 글로벌화란 각 문화의 고유성을 중심으로 문화가 통합되거나 재편되는

24) 노만 테빗(Norman Tebbit)의 악명높은 ‘크리켓 테스트’는 한 국가의 시민권이 일련의 법적 권리들이라기보다는 오히려 국민적 정체성의 상징으로 인식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일례이다(피어슨 1998, 193).

것이 아니라, 각각의 고유문화라는 개념 자체가 서로 섞이면서 중층적으로 분화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문화적 혼종 현상은 로컬공간이 지닌 개방성에 의해 더욱 촉진된다. 글로벌 네트워크 체제의 기본단위를 이루고 있는 로컬공간은 글로벌한 스케일과 국지적 스케일을 넘나들며 다른 로컬과 관계를 맺고 있으며, 여기서는 지리적 근접성보다 연결성과 상대적 위상이 관계형성의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 다양한 문화가 지닌 장소성과 정체성이 충돌하는 ‘차이의 공간’이자 ‘혼종의 공간’으로서의 로컬공간의 특성을 잘 드러내는 것이 바로 디아스포라적 공간이다. 브라(A. Brah)는, 디아스포라와 경계 또는 위치의 정치학이 오늘날 인간, 재화, 정보, 문화, 자본의 초국가적인 이동을 역사적으로 다시 파악할 때 관건이 되는 개념이라는 인식에 입각해서, 디아스포라적인 공간을 단지 국경을 넘어 이동하는 사람들과 그 자손의 문제로서만이 아니라, 토착민으로 간주되는 사람들까지 포함한 혼성적 사회공간의 문제로 제시하고 있다. 디아스포라적인 공간은 단지 이동과 이산의 공간이 아니라, 이동이나 이산과 정착이나 응집의 동적인 관계성을 포함한 중층적이고 매개적인 공간인 것이다.²⁵⁾

디아스포라적 공간으로서의 로컬공간은 국민국가적 동일성에 포섭되지 않은 혼종성과 차이를 그대로 품고 있다. 일반적으로 디아스포라적인 공간이라고 말할 때, 그것은 일단 기원의 땅과 공간적으로 분리되어 있으면서도 심상적으로는 어떤 식으로든 유대를 계속 가지고 있는 상태를 가리킨다. 디아스포라적 공간에 적극적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이곳(타향)에 거주함으로써 그곳(조국)으로의 연계나 연대가 상정되는 것이지, 단지 하나의 단절된 기원이 조국에 있다는 것은 아니다(강·요시미 2004, 187). 여기서 특정로컬에서 현지인과 어울려 살아가는 이산인의 현실적인 삶에 주목할 때, 뿌리나 국적의 관점에서만 디아스포라의 복합성을 읽어내려는 기존 논의의 한계를 극복하고,

25) (Brah, 1997/강·요시미 2004, 194에서 재인용).

디아스포라적 공간 자체가 지닌 진정한 의미를 읽어낼 수 있다. 이를 재일코리안의 문제에 적용시켜보자면, 이제 재일코리안은 자신이 살고 있는 일본의 지역사회에서 일정한 장소 정체성을 지역민과 공유하는 것과, 자신이 살고 있는 곳과 무관한 한국인으로서의 국민적 정체성을 구분할 수 있게 되고, 정체성의 충돌로 인해 심각하게 고민하지 않고도 이를 양립시킬 수도 있게 된다. 개인이 지닌 정체성은 중층적이며, 로컬 정체성 또한 혼종성을 품고 있기 때문이다.

2. 저항 정체성

로컬공간의 정치, 특히 로컬에 기반한 사회운동은 신자유주의적 글로벌화의 일방적인 전개에 대한 저항의 중요한 원천이 되고 있다. 글로벌한 자본의 논리는 국민국가의 경계를 넘어 일상생활이 이루어지는 로컬현장에 까지 바로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반해, 그동안 율타리가 되어 왔던 국민국가는 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사람들은 자아인식과 자율적 조직의 원천인 로컬리티(locality)의 기초 위에서 이에 대응할 필요성을 느끼게 되기 때문이다. 즉, 글로벌한 범위로 세계가 새롭게 구조화되는 와중에서 사람들은 정체성의 혼란을 겪게 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 정체성의 단위는 더욱더 로컬화 되어 자신이 처한 환경과 경험에 바탕을 둔 실지(實地) 또는 장소의 정체성이 강조되는 역설이 출현하는 것이다. 카스텔은 이러한 정체성을 방어적인 정체성, 즉 “미지의 통제 불가능한 것들에 대한 예측 불가능성에 대항하여 사람들이 방어벽을 쌓는 기지(既知)의 정체성이다.”라고 해석한다(Castells 1997, 61). 저항의 공동체로서의 로컬공간을 통해 사람들은 신자유주의적 글로벌화가 만들어 내는 유동공간의 탈장소적 논리에 대항하여 자신의 장소와 정체성을 방어한다. 사람들은 시공을 압착하고 초월하는 초시간적 기억이 역사적 기억을 해체하고, 가상현실이 장소성의 가치를 위협하는 글로

별화의 흐름에 저항하면서, 경험에 근거한 역사적 기억과 자신들의 장소가 지닌 가치의 진실성을 주장한다. 이처럼 로컬공간은 한편으로는 분권화된 국가권력의 발현으로 자본의 논리가 그대로 관철되는 현상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새로운 문화적 정체성, 즉 국민국가 전체의 정체성과는 차별화되는 로컬 정체성이 형성되는 곳이기도 하다.

신자유주의적 글로벌화가 확산되고 심화될수록, 그 과정에서 표출되는 문제들을 극복하기 위한 대안적 논리도 적극적으로 모색되어지고 있다. 여러 측면에서 제시되고 있는 대안들 가운데 로컬공간과 관련하여 주목할 만한 흐름이 바로 ‘장소의 정치’ 또는 ‘정체성의 정치’에 대한 관심이다. 장소의 정치 또는 정체성의 정치는 정치적 관심영역과 지향점에 있어 기존의 정치와는 다른 새로운 대안적 논리를 제시한다. 여기서 장소는 사회적 관계, 특히 사회적 힘의 교차나 그 힘관계의 산물로 정의되며, 특정집단이 장소를 정의하고 그 장소의 의미를 지배함으로써 그곳의 사람들을 지배할 수 있게 된다. 장소의 정치는 일상적 경험과 구체적 실천에 기초하여 생활세계를 둘러싼 이해의 응집에 기초한 삶의 정치를 통해 정체성을 되찾고자 하는 운동이다. 이러한 정치에서 장소는 글로벌화의 과정 속에서의 주체적 관점과 위상의 중요성을 고찰할 수 있도록 하며 또한 체계화된 지배적 권력에 도전할 수 있는 정당성과 역량을 제공하는 것으로 인식된다(최병두 2002a, 207).

장소의 개념은 정체성 상실에 대한 비판적 대안으로도 재구성되고 있다. 특히 최근의 장소에 관한 연구는 포스트모던 철학 및 사회이론과 결합하면서 새로운 의미를 추가하고 있다. 예를 들어, 장소의 정체성에 관한 연구는 장소가 만들어내는 차이 또는 특수성에 기초하여, ‘차이’와 ‘타자’에 대한 이해를 강조한다. 장소에 근거한 차이는 한편으로 지배적 권력에 의해 생산되거나 재생산 되지만, 다른 한편으로 이러한 권력에 저항할 수 있는 힘 또한 제공한다. 여기서 장소성 회복을 위한 실천으로서의 장소정체성에 대한 강조와 장소감의 의도적

배양, 즉 특정 이해집단이 자신의 이해관계를 실현시키기 위해 장소 정체성을 조작하는 행위는 명확히 구분되어야 한다. 로컬적인 것은 글로벌화에 대한 저항의 터전으로 중요하지만, 그것은 로컬이 억압과 차별을 없애는 해방의 비전을 제시할 수 있을 때 가능하다. 딜릭(A. Dirlik)은 이러한 로컬에 대한 새로운 관심을 ‘비판적 로컬리즘’으로 명명한다. 비판적 로컬리즘은 과거의 공동체에 대한 낭만적 향수나 새로운 종류의 헤게모니 지향적 갈망 혹은 현재를 과거 속에 가두는 역사주의에 근거한 로컬리즘에서 벗어나, 과거의 관점에서 현재를 비판적으로 평가하면서도, 과거를 평가하는 경우에는 근대성으로부터 제공받은 비판적 관점을 견지하는 태도를 가진다(딜릭 1998, 141).

새로운 대안적 정치로서의 장소의 정치는 로컬공간과 같은 국지적인 위치에서의 실천을 강조한다. 대안적 정치공간으로서의 로컬정치란 글로벌화와 탈근대에 대한 성찰을 통해 그것이 로컬공간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하고, 이에 대응할 수 있는 자율적인 실천 방식을 찾아나가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로컬공간 단위의 실천은 글로벌화라는 거대하고 위협적인 흐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국가단위의 거시적인 대응보다는 ‘지금, 여기’라는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위기의식을 바탕으로 한, 즉각적이고 현실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인식에서 비롯되었다고 볼 수 있다. ‘지금, 여기’의 일상에 바탕을 둔 저항적 실천의 예는 여성운동, 환경운동, 공동체운동 등에서 발견할 수 있다.²⁶⁾ 이러한 운동들은 일상의 문제를 해결하는 활동을 통해 저항 또는 해방의 의제를 제기하고 있는데, 여기서 일상의 문제들이란 글로벌 자본과 권력이 세계 모든 지역의 일상적인 삶에 침투함으로써 제기된 것이다. 일상의 삶에서 비롯된 다양하고 구체적인 실천 운동들을 기존의 구조적이고 추상적인 저항운동에 종속시킨다면 이

26) 인도 북부의 ‘나무 끌어안는 여성들’에서 마길라도라 산업단지의 여성들까지, 캔자스주와 미국에서 분리되기를 원하는 캔자스 서부의 군(郡)들(딜릭 1998, 140), 그리고 생활공동체를 통해 자본주의 질서를 거스르는 일본 생활클럽운동의 ‘언페이드 워크’(요코다 2004, 133) 등은 좋은 사례이다.

는 결국 해방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지역에서 발휘되는 창조성을 가로막겠다는 것에 다름 아니다. 저항의 문화는 미리 정의되어 있기보다는 지역 공동체의 온존성과 생존을 위한 투쟁의 과정에서 출현하기 마련이다(딜릭 1998, 110). 로컬적인 것에 기반 한 정치전략은 로컬적인 것에 관한 이상적이거나 이론적인 관념보다는 현재의 구체적인 상황을 출발점으로 삼아야 한다.

로컬-국가-지역-글로벌의 중층적 층위로 공간단위가 재영역화되는 상황에서, ‘과연 공간단위의 층위 또는 스케일에 따라 사람들이 체감하는 정체성의 차이는 존재하는가?’ 라는 질문은 저항 정체성의 근원으로서의 로컬 정체성의 의미를 확인하는 질문으로도 여겨진다. 이와 관련한 하나의 조사결과를 소개하면, 노리스(P. Norris)는 1990~1995년과 1995~1997년에 수행된 세계가치조사의 자료를 재가공하여 분석한 자료를 통해, 단지 15%의 사람만이 1차적 정체성으로서 자신들이 살고 있는 대륙이나 세계에 가깝다고 느끼고 있고, 순수한 코스모폴리탄, 즉 배타적으로 대륙 또는 세계 정체성을 나타내는 사람은 단지 2%에 불과했으며, 약 38%의 사람들은 국가를 영토적 정체성의 1차적 원천인 것으로 고려하지만, 가장 널리 확산된 1차적 영토정체성은 로컬(지역/지방)이라는 점을 밝히고 있다. 그리고 순수한 지역주의자, 즉 자신들의 지역이나 지방에 대해서만 동일시하는 사람들은 응답자 중 약 20%에 달해 순수 코스모폴리탄에 비해 10배나 더 높은 수치를 나타내고 있다(Castells 1997, 272).

VI. 끝맺는 말

이상에서 탈근대 공공공간의 재영역화, 즉 근대 국민국가중심의 체제가 약화되고 공간단위가 중층화·다원화되는 상황에서 로컬공간이 지닌 대안적 공간으로서의 가능성을 고찰해 보았다. 고찰된 내용을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다. 우선 제2장에서는, 국민국가의 약화와 더불어

어 진행되고 있는 새로운 공공공간의 존재방식은 중층성과 다원성을 바탕으로 단위들 간의 교류와 네트워크가 강화되는 특징을 나타내며, 이는 로컬공간의 역할과 의미가 강화되는 가능성을 지님을 서술하였다. 제3장에서는, 국가중심의 대의제 민주주의가 그 정당성과 기능에 있어 위기에 직면하면서, 이를 극복하기 위해 제시되고 있는 대안적 민주주의의 형태들, 즉 참여(직접) 민주주의, 결사민주주의, 심의 민주주의가 공간 단위의 측면에서 로컬공간과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음을 밝혔다. 제4장에서는, 공공공간의 주체와 운영원리의 측면에서 새로운 대안적 정치원리를 찾고자 하는 시도로서, ‘생활정치’와 ‘거버넌스’ 논의가 가진 의의를 로컬공간의 관점에서 고찰하였다. 포스트모던적 정치원리는 체계의 메커니즘에 의해 식민화된 생활세계의 복권에 중요한 의미를 부여하고 있으며, 대안적 정치로서의 가능성을 여는 생활정치가 이루어지는 토대는 일차적으로 로컬공간에서 찾을 수 있다는 점과, 로컬공간에서 이루어지는 정치는 생활의 영역과 정치적 대표 사이에 직접적인 연계가 존재한다는 점에서 대의제의 한계를 극복하는 의미가 확인된다. 또한 국가-시장-시민사회 영역 간의 통합적 조절체계로서의 거버넌스는 사회적 자본이나 시민사회영역의 역할 증대를 주요 특징으로 하며, 여기서 시민사회는 일상의 활동이 전개되는 로컬공간을 주된 배경으로 한다는 점에서 로컬 시민사회가 대안적 정치공간으로서의 가능성을 지님을 고찰하였다. 제5장에서는 장소성과 저항정체성의 공간으로서의 로컬공간의 의미를 살펴보았는데, 먼저 글로벌화의 진행과 함께 공간의 유동성과 등질화가 가속화될수록, 사람들이 느끼는 공간적 정체성은 로컬공간의 장소를 중심으로 복귀하는 경향이 두드러짐을 고찰하였다. 국가공간이 포섭과 배제의 메커니즘을 통해 대내적 동일성과 대외적 배타성, 그리고 상상의 정체성이라는 특징을 지녔다면, 로컬공간은 이에 대비되는 개방성과 혼종성, 그리고 장소 정체성이라는 특징을 지니며, 이 점에서 로컬공간은 탈중심화, 탈구조화를 지향하는 탈근대적 공간으로서의 가능성을 지니고 있음을 밝혔다. 또한 로컬공간은 신자유주의적 글로벌화의

일방적인 전개에 대항하는 저항의 원천이 되고 있다. 국민국가가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사람들은 자아인식과 자율적 조직의 원천인 로컬리티의 기초 위에서 이에 대응할 필요성을 느끼게 되기 때문이며, 여기서 저항 정체성의 바탕이 되는 장소의 정치성, 자율성, 차이와 타자에 대한 이해, 국지적 실천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역시 대안적 정치로서의 가능성을 지님을 밝혔다.

글로벌라이제이션이라는 용어의 유행이 나타내듯, 학계나 사회적으로 글로벌화와 함께 로컬에 대한 관심도 증대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로컬화’라고 표현되는 이러한 관심은 두 가지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것 같다. 그 하나는 국가권력의 분산으로서의 로컬에 대한 관심이다. 근대적 국가중심성의 원리가 한계를 드러내면서 제기되기 시작한 분권화 논의가 그것이다. 이러한 분권화의 논의는 최근의 탈근대 담론과 연결되면서, 단순히 국가중심성이나 대의제 민주주의를 보완하는 의미에 그치지 않고, 새로운 정치원리나 대안적 정치체제에 대한 모색으로까지 이어지고 있다. 근대의 국가중심성이 야기한 문제를 근대적인 제도나 틀 속에서 해결한다는 것은 한계를 지닐 수밖에 없다. 로컬공간이 대안적 공공공간으로서 가능성을 지닌다는 의미는 새로운 시각과 제도적 틀을 제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른 하나는 탈근대 신자유주의적 글로벌화의 흐름과 관련된 로컬화이다. 여기서 로컬은 위기와 가능성의 두 가지 측면에 직면한다. 국가라는 울타리에서 벗어나 직접 글로벌화의 과고를 맞이하게 된 로컬은, 한편에서는 글로벌 자본주의라는 더욱 강력한 논리에 새롭게 포섭되어 자본의 구미에 맞게 재역영화 될 가능성이 다분한 반면, 다른 한편에서는 로컬공간이 글로벌화가 지향하는 유동성과 동질화라는 가치에 대치되는 장소정체성과 자율성, 고유성을 품고 있다는 점에서 저항 정체성의 기반이 되기도 한다. 글로벌화를 추동하는 힘이 자본이고 이것이 시장의 기능을 더욱 강화시켜 나간다면, 로컬화는 시민사회 영역에 의해 지지되면서 민주주의에 기반 한 시민사회영역을 더욱 강화시켜 나갈 것이기 때문이다.

< 참고문헌 >

- 강상중·요시미 순야 저, 임성모·김경원 역, 2004, 『세계화의 원근법』, 이산.
- 김비환, 2005, 『포스트모던 시대의 정치와 문화』, 박영사.
- 김용규, 2008, “로컬리티의 문화정치학과 비판적 로컬리티 연구”, 『한국민족문화』 32집, 부산대 한국민족문화연구소.
- 마누엘 카스텔 저, 정병순 역, 2008, 『정체성 권력』, 한울.
- 마르코 마르티넬로 저, 윤진 역, 2002, 『현대사회와 다문화주의』, 한울.
- 마리옹 그레·이브 생또메 공저, 김택현 역, 2005, 『뽀루뚜알레그리 새로운 민주주의의 희망』, 박종철출판사.
- 박춘서, 2003, “하버마스 공론영역 개념의 의미 변천 고찰”, 『경남지역연구』 vol. 9, 경남대 경남지역문제연구원.
- 브라이언 터너 저, 최우영 역, 2005, 『막스베버- 근대성과 탈근대성의 역사사회학』, 백산서당.
- 사이토 준이치 저, 윤대석·류수연·윤미란 역, 2009, 『민주적 공공성』, 이음.
- 스튜어트 홀 저, 전효관·김수진 외 역, 2000, 『모더니티의 미래』, 현실문화연구.
- 아리프 딜릭 저, 설준규·정남영 역, 1998, 『전지구적 자본주의에 눈 뜨기』, 창작과 비평사.
- 오재환, 1996, “일상생활의 구조와 생활정치”, 『사회조사연구』 11-1, 부산대 사회조사연구소.
- 요코다 카쓰미 저, 나일경 역, 2004, 『어리석은 나라의 부드러우면서도 강한 시민』, 논형.
- 이매뉴얼 윌러스틴 저, 이광근 역, 2005, 『세계체제분석』, 당대.
- 이상봉, 2008, “탈근대, 공간의 재영역화와 로컬·로컬리티”, 『한국민

- 족문화』 32, 부산대학교 한국민족문화연구소.
- 이성화, 1994, “포스트모더니즘과 미시정치학-푸코의 계보학”, 『한국정치학회보』 28-1, 한국정치학회.
- 조명래, 2002, “지구화, 거버넌스, 지방정치”, 『도시연구』 8호, 한국도시연구소.
- _____, 2006, “자치시대 지역주의의 양상과 쟁점-신지역주의와 지역민주주의의 문제를 중심으로-”, 『한국지역개발학회지』 18-2, 한국지역개발학회.
- 주성수·정상호 편저, 2006, 『민주주의 대 민주주의』, 아르케.
- 최병두, 2002a, 『근대적 공간의 한계』, 삼인.
- _____, 2002b, “새로운 지역지리학과 세계화시대 지역발전”, 『한국지역지리학회지』 8-2, 한국지역지리학회.
- 크리스토퍼 피어슨 저, 박형신·이택면 역, 1998, 『근대국가의 이해』, 일신사.
- 홍원표, 1997, “정치적 탈근대성과 정치공동체: 배제, 과잉, 균형의 정치” 『한국정치학회보』 31-1, 한국정치학회.
- 홍태영, 2002, 『국민국가의 정치학』, 후마니타스.
- 篠原一, 2004, 『市民も政治學：討議デモクラシーとは何か』、岩波書店.
- 森岡清志, 2008, 『地域の社會學』, 有斐閣.
- Brah, A., 1997, *Cartographies of Diaspora: contesting identities*, Routledge,
- Beck, U., 1997, *The Reinvention of Politics*, Polity Press.
- Castells, M., 1996. *The Rise of the Network Society*, Blackwell, Oxford.
- Castells, M., 1997, *The power of Identity*, Blackwell, Oxford.
- Fung, A. & Wright, E. O. eds, 2003, *Deeping Democracy : Institutional Innovation in Empowered Participatory Governance*, London and New York: Verso.

- Morgan, K., 1997, "The learning region: institutions, innovation and regional renewal." *Regional Studies* vol.33.
- Scott, A., 1998, *Regions and the World Economy: The Coming Shape of Global Production, Competition and Political Order*, Oxford, U.P.
- Smith, A. D., 1986, *Theories of Nationalism*, 2nd edn, New York: Holmes & Meier,
- Stoper, M., 1997, *The Regional World: Territorial Development in A Global Economy*, Guilford, New York.
- Toffler, A., 1980, *The Third Wave*, New, York: William Morrow & Co.
- Weber, M., 1970, "Politics as vocation." in H. H. Gerth and C. W. Mills, *From Max Weber*, London: Routledge & Kegan Paul.

A Study on the Possibility of the Local Space as a Alternative Public Space

Lee, Sang-Bong
(Pusan National University)

Abstract

This paper examines the change of the nation-state system as a symbol of modern public space, based on the standpoint of local space. This change, as it is called glocalization, has been mainly analyzed by the state or global centric viewpoint. That is to say, the key point of disputes focused on the possibility of the formation of transnational order or the decline of nation-state system. However, if we take note that the momentum of the decline of nation-state system can be founded by not only globalization but localization, that is, the changes of the inside and outside of nation state. We will find the possibility of local space as a alternative public space. In consequence, this paper suggests the three aspects of possibility of local space. That is, ①The spaces of participation and decentralization contrast to the modern spaces of representative and centralization ②The spaces of everyday life and governance contrast to the modern spaces of institution and government ③The spaces of placeness and resistance identity contrast to the modern spaces of assimilation and exclusion.

Keywords : Public space, Local space, Locality, Alternative democracy, Cultural politics, Governance, Placeness